

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

오리사육 농가의 재산권 보장해야
더는 오리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

한국오리협회 전북도지회
박하담 지회장

말 잘 들어도 보상 못 받는 오리 농가

한국오리협회 박하담 전북도지회장은 '5월 12일 시달된 저소득안정자금 지침에 따르면 HPAI 칠새분변이 발견된 농장, HPAI에 걸린 농장 등과 그 반경 방역대로 묶여 살지 못한 농가의 보상 비용에 차이를 둔다고 명시돼있다. 정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'고 전했다.

이어 '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면서도 공공을 위해 정부에 힘조란 농가들에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'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

오리 사육소득 10년 전의 1/3에 불과

오리 농가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오리 농장의 경영상황은 악화하고 있다. 연간 사육 횟수가 감소, ❖ 지속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, 휴지기제 도입 등으로 오리 사육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.

박 지회장은 '2010년 오리업계에 들어온 그때만 해도 년 11~12회전까지 할 수 있어서 오리 농가의 수익은 괜찮은 편이었다. 하지만 한반도 ❖ 발생, 일제 입식-출하(이하 올인-올아웃)로 사육방식이 바뀌고 나서 오리사육은 년 3~6회에 그쳤다. 그마저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들어가면 더 줄어든다. 현재 소득이 10년 전의 반토막도 안 된다고 말했다.

이어 박 지회장은 오리사육에서 육계 사육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리 산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농가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.

그는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'올인-올아웃' 방식이 충분한 연구와 계도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오리 산업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되며 오리사육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. 오리사육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❖ 방역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, 농식품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'라고 전했다.



- 1 오천만에 오리로전 농장
- 2 농가이 야간에 귀 기울이기 바라는 마음으로 개락안 건목도 기피 일관

오리 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해야

박지회장은 '노후화된 오리 육사 시설 또한 A 발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육사를 현대화해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싶지만 불안한 오리업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선불리 투자할 수도 없다'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.

박지회장은 '3년 전 육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었지만, 오리 농가들에는 그림의 떡이었다. 당시 정부 지원 30%, 자부담 70%이었는데 자부담을 위해 용자를 받기에는 소득조자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'라고 말했다.

하지만 박지회장은 'A의 근본적인 방역대책 효과가 있고 빛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오리 농가들도 육사시설 현대화에 힘줄 것으로 생각한다'며 '막을 수 없는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A로 인해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다 보니 그 비용의 일부를 선제적 방역의 일환인 육사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협회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.

- 1, 2 농장 방역을 위해 농장입구 소독시설을 구비하고 있다.
- 3 분동을 위해 집집을 건조하고 축산하게 집이 늘었다. 이날 오리들은 이곳으로 이사온다고 했다.
- 4 분동을 위해 오리들 기일려 편편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박지회장.
- 5 박지회장 김복희회장과 김인택 김복희회 사무국장.





4

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 극복하길

올 4월부터 전북도지회장을 맡은 박하담 지회장은 2010년 오리업계에 발을 들였다. 오랜 기간 있던 보령업계에서 지역지부장까지 했던 박 지회장은 우연한 기회에 오리업계에 들어온 이후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을 모두 경험했다. 갈수록 어려워지는 오리 사육여건이지만 이렇수록 오리 농가가 힘을 합쳐 이 시기를 갈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. 그는 인터뷰 당일도 김민택 전북도지회 사무국장과 인안을 나누고 있었다.

박 지회장은 '정부 회의에 갈 때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항상 도지회 회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한다. 또한, 전북도 200여 농가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는 의견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'라며 오리 농가의 합심을 강조했다.

이어 그는 '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리사육 농가가 오리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A의 근본적인 대책과 정부에 힘조한 오리 농가들의 손해가 없도록 정부가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'고 말했다.



5